여성·가족·청소년이 함께 만드는 성평등한 민주사회

2018년 여성가족부 업무보고

2018. 1.

여성가족부

목 차

Ⅰ. 2018년 업무추진 여건 ····· 1

Ⅱ. 2018년 업무추진방향 ····· 3

Ⅲ. 주요업무 추진계획 ····· 4

1 일터와 삶터에서의 성차별 해소 ····· 5

2 여성폭력 예방 및 대응력 강화 ····· 12

3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 ····· 18

4 청소년의 역량강화와 균형있는 성장 ····· 25

[붙임] 2018년,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····· 33

Ⅰ. 2018년 업무추진 여건

□ 성평등이 지속가능 사회의 핵심 가치라는 공감대 확산

○ **성차별적 제도**와 **관행 개선** 등 **양성평등 정책 중요성** 증가

※ 경제활동참가율의 성별 격차 50% 감소시 한국의 GDP는 9.8% 증가('12, OECD)

○ **여성혐오와 차별, 성폭력 관련 이슈**가 **중요한 사회 문제**로 제기되어 **양성평등 문화** 및 **교육 확산** 필요성 제기

※ '성평등' 빅데이터 분석 결과(최근 3년) : 부정 연관어 1위(여성혐오), 2위(차별)

○ **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 증가**로 인해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**다각적인 대응 필요성** 증대

⇨ 공감과 소통으로 성평등 확산 및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강화 요구

□ 저출산·고령사회 대응과 혁신성장을 주도할 여성인력의 중요성 대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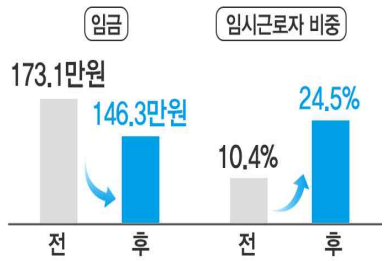
○ **인구절벽·고용절벽** 시대에 **여성의 사회참여 확대**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필수조건이나, **고용상 성별 격차**와 **성차별 관행 지속**

○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시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로 하향 취업하는 비중이 높아 **양질의 일자리 연계** 및 **경력단절 예방**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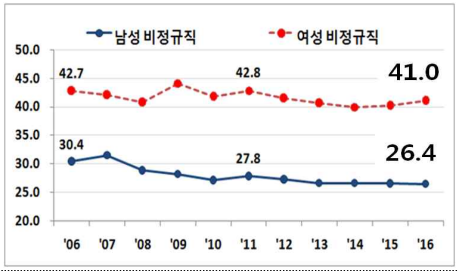
<성별임금격차('16.6월)>



< 경력단절 전·후 비교('16) >



< 여성·남성 비정규직 현황('16) >



⇨ 경력단절 사전 예방 및 4차 산업혁명 대비 여성일자리 정책 강화 요구

□ 최근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참여 욕구 해소 및 위기청소년의 체계적 지원 필요

○ 청소년들이 **창의적이고 주도적**으로 성장할 수 있는 **환경 조성**과 **사회 참여욕구**를 표출할 **참여의 장** 마련 필요

○ **위기청소년에 대한 예방·보호·자립의 종합적 지원체계 강화** 필요

※ 학교 밖 청소년은 39만 여명,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은 77만 여명으로 추산('16년, 11~18세 청소년의 17.7%)

○ 스마트폰 과의존 등 **새로운 유해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** 요구

※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현황(2016년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)
: 30.6% (초등학생 23.6%, 중학생 34.7%, 고등학생 29.5%)

⇨ **다양한 체험활동으로 청소년 역량 제고 및 촘촘한 청소년 안전망 강화 필요**

□ 가족 형태의 다변화와 가족위기 심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요구

○ **다양한 가족** 증가에 따른 **대상별 맞춤형 지원** 필요

< 1인 가구 >	< 한부모 가구 >	< 다문화 가구 >
		

※ △ 한부모가 필요로 하는 지원 1순위 : 생계비·양육비('15년, 한부모가족 실태조사)
△ 문화차이와 차별·편견 등으로 한국생활 어려움 : 38.3%('15년, 다문화가족 실태조사)

○ 맞벌이 가정의 경우 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**가정 내 돌봄**을 **선호**하지만 **아이돌봄 대기수요,** 방과후 **초등돌봄 부족** 등 **공백 발생**

※ △ 영아를 돌봐줄 사람이 있다면 시설이용을 하지 않겠다 : 21.8%('15년, 복지부)
△ 자녀가 어릴수록 맞벌이 가구 비중이 낮음('17년, 통계청)
: 6세 이하(39.7%), 7~12세(52.7%), 13~17세(58.3%)

○ 최근 심각한 **아동학대 예방**을 위한 **가족관계 개선** 및 **서비스 강화** 필요

※ 아동학대의 약 80%가 부모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고, 그 원인으로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가장 높은 비중(약 35%)을 차지('16년 전국아동학대보고서)

⇨ **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가족관계 개선 및 빈틈없는 돌봄 체계 구축 중요**

Ⅱ. 2018년 업무추진 방향

◇ '18년은 '여성·가족·청소년이 함께 만드는 성평등한 민주사회' 원년으로,

△ 소통과 거버넌스로 사회 곳곳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고, 3대 폭력(아동학대, 청소년폭력, 젠더폭력)에 적극 대처

△ 양질의 여성일자리 확대로 소득주도·혁신성장 선도

△ 일·생활 균형과 돌봄의 국가책임성 강화로 저출산 완화

☞ 국민이 공감하고,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효과 창출

1 정부 주도에서 소통과 민관 거버넌스 중심의 협업체계로 개편

○ 정책 수요자·지역기관·단체 등 민간의 **정책 과정 참여**와 **소통 강화**

○ **여성과 남성이 함께**하는 **양성평등 문화**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

○ **부처간 협업**을 **강화**하여 **양성평등 정책**의 **효과성 제고**

2 경력단절 사후대책에서 사전예방과 고용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전환

○ **세대별 여성 일자리** 정책과 **경력단절 사전 예방** 기능 강화

○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산업 및 사회적 경제 등 **여성 일자리 창출**

○ 고용상 성차별 해소 및 일·생활 균형 등 **성평등 기업 문화 조성**

3 위기 가족·청소년 중심에서 모든 가족·청소년으로 정책 대상 확대

○ 가족유형별 자녀 양육 및 자립여건 개선으로 **사회적 차별 개선**

○ **아이돌봄 지원 확대** 및 **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강화**로 **양육여건 개선**

○ 역량중심, 자기주도형 청소년활동 전환으로 **능동적·창의적 역량 제고**

4 분절적·사후적 지원에서 통합적·예방적 지원으로 사회안전망 강화

○ 일상생활 속 **여성폭력 대응력 제고와** 여성폭력 예방환경 조성

○ 아동학대가 우려되는 **위기가족 지원 확대 및 가족관계 개선**

○ 청소년의 **건강한 성장**을 위해 **촘촘하고, 제대로 작동**하는 **안전망** 강화

Ⅲ. 주요업무 추진계획

비전	여성·가족·청소년이 함께 만드는 성평등한 민주사회			
정책 목표	일터와 삶터에서의 성차별 해소	여성폭력 예방 및 대응력 강화	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	청소년 역량강화와 균형있는 성장
실천 과제	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개편 및 실행력 강화	신속하고 강력한 여성폭력 대응체계 마련	가족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	청소년 활동 및 성장지원 기반 혁신
	소통과 거버넌스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	여성폭력 피해자 중심의 지원서비스 내실화	지역사회 중심 돌봄 공동체 활성화	청소년의 진로찾기 지원 강화
	혁신성장을 위한 여성일자리 창출	예방교육 실효성 제고 및 홍보 강화	아이돌봄 서비스 확대로 육아의 국가책임성 강화	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
	성별임금격차 해소 등 성차별 고용환경 개선	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강화	다양한 가족의 안정적 양육 및 자립지원 확대	위기청소년을 위한 촘촘한 안전망
	공공·민간·지역에서의 여성의사결정권한 강화	일본군'위안부'피해자 명예와 존엄회복 및 생활안정 지원	다문화 가족 인권보호 및 참여 확대	청소년 민주시민 역량 제고와 지자체 청소년 정책 활성화

◆(국민 체감) 국민이 **체감하는 정책** 추진으로 **신뢰성** 제고
◆(소통·협업) 부처·민간·지역 **거버넌스 구축**으로 **정책 효과성** 증대
◆(현안 대응) **차별·젠더폭력** 등 **각종 현안**에 대한 **신속한 대응** 강화

1 일터와 삶터에서의 성차별 해소

1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개편 및 실행력 강화

◈ 양성평등 정책 총괄·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등 단계적 추진
◈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 및 생활밀착형 정책에 성평등 관점 반영

□ 양성평등 정책 총괄·조정 기능 및 거버넌스 강화

○ **범부처 정책 조정·이행점검 강화**를 위해 양성평등위원회 내실화 및 국정과제인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* 설치, 성평등정책 전문 전담인력 배치 등 단계적 추진

* (국정과제 세부내용)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전담 사무국 신설 및 전담인력 배치

○ **국민이 체감**하는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해 **민관 거버넌스 강화**

* 시민단체, 온라인 커뮤니티, 부처별 성평등 관련 위원회 등과 상시 협력체계 구축

○ **지역 성평등 격차 해소**를 위해 양성평등 정책 담당자 회의 등 **중앙·지역 상시 협력체계** 운영('18.2월) 및 **지역 전달체계 구축 방안 마련**

□ 생활밀착형 정책 추진으로 양성평등 정책의 실효성 제고

○ **「부처별 성평등 실행 목표」** 이행지원*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한 **정부 정책 개선**

* 성평등 목표 수립 근거 마련을 위한 「양성평등기본법」 개정 추진

○ **성별영향분석평가**의 **실효성 증진**을 위한 **제도 개선*** **추진**

* 전문가 심층 분석 도입 및 평가결과의 성인지 예산서 반영확대 등

- **생활밀착형 정책**에 대한 **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**를 반영하여 **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변화 유도**

주요 대상 정책 및 개선과제 (예시)

변호사시험 응시 기회 제한 규정	▪ 「변호사시험법」상 변호사 시험 응시기회 제한의 예외 사유로 '출산' 등 규정 방안 검토
건설현장 여성근로자 편의시설 지원 정책	▪ 편의시설 설치·이용 시 성별 특성을 반영한 세부 기준 마련 ▪ 편의시설 현황 및 성별 만족도 파악을 위한 정기 실태조사 실시

○ **여성 건강 이슈**(피임 및 인공임신중절, 산후 및 양육 우울증 등)에 관한 **정책과제 발굴** 및 대응

2 소통과 거버넌스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

◈ 청년여성, 남성 등과의 소통·참여 강화로 성별 격차 해소 및 생활 속 성평등 확산
◈ 미디어·온라인·생활환경에서 성차별 해소 및 여성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 조성

□ 청년여성, 남성과 함께하는 양성평등 교육 및 문화 확산

○ **2030 여성 정책 수요자**의 **직접 참여**로 **체감**할 수 있는 **양성평등 정책** 추진

- 취업 준비생, 워킹맘 등 정책 수요자가 참여하는 「**청년과 함께하는 여성정책 참여단***」 구성·운영

* 주요 정책 입안부터 발표까지 정책수요자가 참여

○ 5대 권역별*로 성평등에 선도적인 남성이 참여하는 「**성평등보이스**」 출범·운영('18.7월), **성평등 남성 참여 모델**을 **지역**으로 **확산**

* 5대 권역 : 서울·경기, 충청, 강원, 호남, 영남

○ 문화·예술·교육 분야 「**10대 성평등 체감 프로젝트**」 추진

문화 · 예술 · 교육 분야 10대 성평등 체감 프로젝트

4대분야 10대과제	영화·음악·미술	① 여성영화인들과 만남, 영화를 통한 성평등 가치 확산 ② 여성주의 뮤지션들과의 만남 * 힙합 장르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성, 여성혐오 등의 문제 및 인식개선 논의 ③ 미술작품, 여성문화사 등을 통한 여성의 현실과 이상 고민 * (21세기 신여성과 만나다) '신여성, 도착하다' 미술전과 연계, 여성에 대한 정치적 · 제도적 불평등 문제 논의
	도서출판	④ 작가 · 출판사의 성평등 도서 제작 · 발간 의욕 고취 * 성평등 우수도서 공모 및 독후감 대회 등 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평등 의식 제고 * TV 다시쓰기, 다시 읽는 그림책, 내가 만드는 성평등콘텐츠 등
	온라인·대중매체	⑥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평등 확산 * 온라인 이용자 · 사업자에 대한 성인지적 자율규제 마련 등 ⑦ '미디어의 외모 · 성형 지상주의' 개선 * 프로그램 제작 시 유의사항 등을 정리한 가이드라인 등 마련 ⑧ 시민 · 청소년으로 구성된 대중매체 · 온라인 모니터단 운영 * 대중매체, 온라인 커뮤니티 등의 성차별 · 선정적 내용 모니터링
	교육·언어	⑨ 게임 · 안전 분야 종사자 대상 성평등 교육 강화 * 게임산업 종사자, 재난안전교육 강사 등 ⑩ 성평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'생활용어' 개선 추진 * (외)국어 사전 모니터링 결과, '성평등 사전제작 안내 리플렛' 제작

○ 분야별·직종별 **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** 강화

- 교육(초중등 교사), 안전(경찰), 건축(건축관련 종사자 등), 문화·예술(영화산업 종사자) 등 분야별·직종별 **양성평등 교육 콘텐츠 개발*** **및 교육****

* 동영상, PPT, 애니매이션 등 다양한 기법 활용

** 유치원·어린이집 교사, 게임산업 종사자, 청렴·재난안전 교육 등 정부시책강사 등(600명)

- 젠더 토크 콘서트, 연극형 교육 등 **소통하는 양성평등 교육** 강화

□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여성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 조성

○ **남녀모두**를 위한 **도시재생 사업**이 될 수 있도록 **거버넌스 구축**

- 사업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**주민주도 조직**(주민협의체) 구성 시 **지역 내 여성 공동체·활동가*** **참여**

*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, 여성친화도시협의체 참여 전문가 등 참여 보장

○ **「여성친화형 도시재생 뉴딜」 시범사업 추진**('18년 2~3개 지역)

- 지자체와 협업하여 **'여성친화컨설팅' 지원** 및 여가부 관련 사업(새일센터·공동육아나눔터 등) 연계를 통해 **시범모델** 창출

여성친화형 도시재생뉴딜 모델(안)

구 분	주요 내용
① 돌봄↔일자리 순환형 도시재생	지역 여성공동체(협동조합, 마을기업 등)를 통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일자리와 돌봄공백을 함께 해결
② 여성친화산업 특화형 도시재생	여성 특화가 가능한 산업(예: 패션봉제산업)이 집중된 지역에 여성 취·창업을 지원하고 돌봄서비스 기능 통합을 통해 생활밀착형 지역경제 활성화

○ 여성친화도시 **조성 단계별**(조성 - 정착 - 확산) **컨설팅·교육**을 **차별화**하는 등 **맞춤형 운영** 지원

□ 성평등 교류 협력 강화

○ **평창동계올림픽** 계기 '여성, 체육의 새지평을 열다' **특별기획전** 순회 전시('18.2.3~3.18, 평창올림픽 홍보관 내)

○ **평화통일**을 위한 **여성걷기 운동,** 글로벌 여성평화리더 초청 '세계여성**평화심포지엄**' 등 평화통일을 위한 **여성연대 활동 지원**

○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**여성사전시관 특별기획전** 개최('18.하)

* 전시주제(안) :「여성과 정치」 또는「여성사회 진출사」

3 혁신성장을 위한 여성일자리 창출

◈ 혁신성장을 위해 청년층, 중장년 등 세대별 여성 일자리 정책 강화
◈ 4차 산업혁명, 사회적경제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한 양질의 여성 일자리 확충
※ 30대 여성 고용률 : ('16년) 58.3% → **('18년) 60.5%** → ('22년) 63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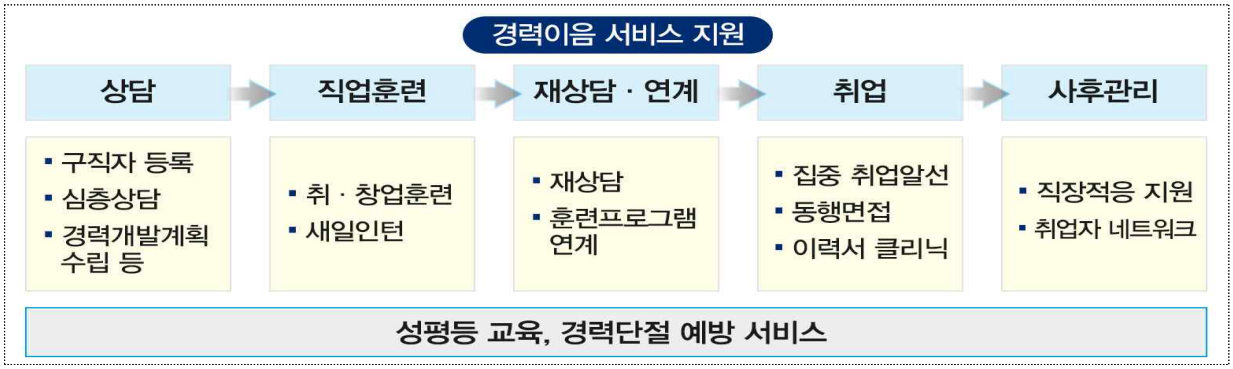
□ 혁신성장을 견인할 세대별 여성일자리 정책 강화

○ **(청년 여성)** 20-30대 청년여성의 일자리 지원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취·창업 커뮤니티 및 멘토링 운영

* (대상) 니트족 20-30대 여성 중심 / (내용) 경력개발 상담, 직무능력·스타트업 및 젠더 의식 강화 프로그램, 전문가·창업자 멘토링, 동아리 및 네트워킹 ⇒ 청년 취·창업 지원

○ **(30대 여성) 경력단절여성에 대한** 전문적 취업지원을 위해 **사례관리형 경력이음 서비스*** 도입

* 전공·경력을 고려, 전담인력이 상담·훈련, 구인 알선 등 全과정 통합 서비스 제공



○ **(중장년 여성) 중앙정부, 광역-기초 지자체 협치**를 통해 **패션의류** 등 지역 산업을 발전시켜 **'중장년 여성 희망 일자리' 창출**

* (예) 여성가족부-시-자치구가 의류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해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기업과 연계해 좋은 여성 일자리 창출

□ 4차 산업혁명 대비 양질의 여성일자리 확충 및 경력단절 예방 강화

○ **신산업 분야 여성의 직무역량 강화**

- 3D프린팅, 빅 데이터, 드론 등 **고부가가치 직종 훈련 확대*** 및 전문 기술과정에 대한 **장기 심화교육과정** 운영

* ('16년) 25개(신규도입) → ('17년) 46개 → ('18년~) 50개 내외 등 지속 확대

○ **「4차 산업혁명과 여성일자리 TF(가칭)」** 구성·운영

- 산업구조 변화에 부합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* 발굴

* 과학기술 등 유망직업군 발굴 및 취·창업 지원체계 구축방안 마련 등

○ 「**새일센터 혁신 컨설팅단**」 구성·운영

- 새일센터에 대한 성과 관리 개선방안*을 마련해 지역수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양질의 일자리 연계 강화

  * 일자리 전문가·공무원 등으로 구성, 새일센터 프로세스 점검 및 컨설팅 실시

○ **재취업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지원 강화**

- 여성의 직장 적응을 위한 **노무·심리 상담, 취업자 네트워크 구축, 멘토링, 자녀 진로 설계** 등 프로그램 운영('18년 15개소 시범)

  * '중소기업 대상 육아휴직자 사례 관리프로그램' 보급, 일·생활 균형 캠페인 등

□ 여성이 선도하는 사회적 경제 영역 일자리 창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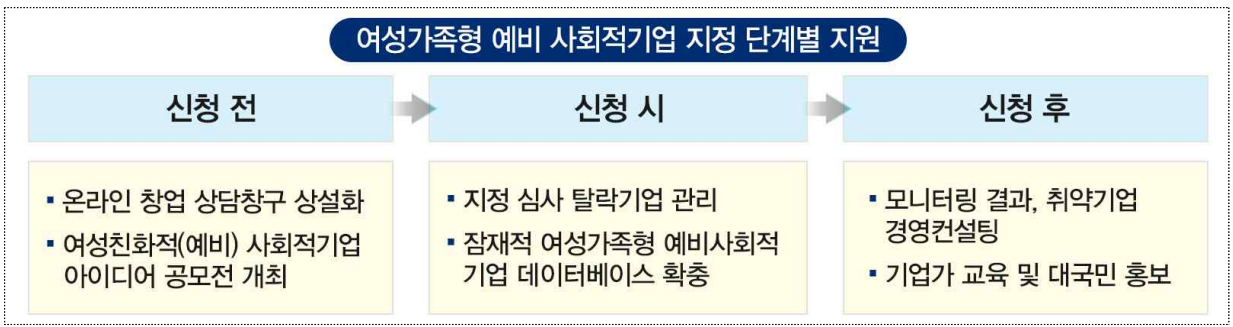
○ **여성 중심 사회적 경제 육성**을 위한 **실태평가 및 체계적 지원**

- 사회적 경제 영역에 대한 **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** 실시 및 **개선방안** 도출

  * 「여성 사회적 경제기업 활성화 로드맵(관계부처 합동)」 수립 추진
    : (주요내용) 공간·컨설팅·네트워킹·판로 등 지원 강화, 취·창업 여건 개선을 위한 보육시설 확충 등

- **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확대**를 위한 **단계적 지원 강화**

  * 임신·육아·학업 등으로 교육, 컨설팅 참여 기회가 제한되는 경력단절여성, 청년 여성을 위한 온라인 상담창구 시범운영('18.하)



○ **새일센터**와 연계한 **사회적 경제 분야 여성 일자리 지원**

- 지역의 특화자원 등을 활용, 사회적 경제 분야 **협동조합·마을기업 등 설립 지원**

  * (예) 충북 영동의 포도 와인 산업 + 영동새일센터의 직업교육훈련 및 창업 동아리 지원 = '와인애푸드' 협동조합 설립

4 성별임금격차 해소 등 성차별 고용환경 개선

◈ 기업과 함께하는 성평등 임금 및 채용 등 기업문화 개선
◈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및 내실화로 일·생활 균형 기업문화 확산

□ 고용부문 성차별 관행 개선으로 성평등 일자리 환경 구축

○ **성별 임금격차 해소**를 위한 **기업 대상 가이드라인 확산** 및 **정책과제 발굴**

* 「성평등 임금 실천 가이드라인」 보급('18.상),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TF 구성·운영(고용부 협업)

○ **성평등 선도기업 육성**을 통한 **성평등 기업문화 확산**('18.하)

- 「**성평등 기업문화를 위한 약속**」 선언 및 **기업의 자발적 성평등 목표 설정 등 성평등 실천 기업 확산**

○ **공공기관 채용상 성차별 방지**를 위한 정책방안(관계부처 합동) 마련

□ 일·생활 균형을 위한 정책 지원 강화

○ **임신·육아기 여성** 대상 **일·생활 균형 제도 정착 지원**
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, 육아휴직, 비정규직 출산·육아 지원 등 **일·생활 균형 우수기업 사례 발굴·확산**

○ **남성의 가사·육아 참여** 확대로 **일·생활 균형 문화** 확산

- 남성 **출산휴가** 및 **육아휴직** 이용 활성화 추진

* 배우자 출산휴가 단계적 확대(3일→10일),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등 제도개선

- **아버지 교육 확대, 아버지 자조모임 구성·운영** 등 남성 육아 지원 강화

○ **가족친화인증 기업 내실화**

- 가족친화인증 기업 **인센티브**를 **확대**하고, 중소·영세기업의 **가족친화 기업 인증 참여**를 위한 **맞춤형 컨설팅 제공**

- **일·생활 균형 중심**으로 **가족친화 인증기준 개편***('18.상) 등 **장시간 근로 개선** 중점 추진

* 장시간 근로해소 방향 지표 개선 및 정성평가를 할 수 있는 우수사례 추가 등

5 공공·민간·지역에서의 여성의사결정권한 강화

◈ 「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계획」의 철저한 이행 및 민간으로 확대
◈ 지역 중심으로 차세대 지역 여성리더 성장 지원

□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유리천장 해소 및 민간으로 확산

○ **「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**('18~'22)」의 차질 없는 시행 및 철저한 이행점검

- 분야별 확대 목표 달성 여부, 차별요소 제거 위한 법·제도* 개선 등 추진내용 점검, 부진기관 개선 권고

* 경찰대학 남녀 모집 폐지 모집요강, 공무원 임용령, 공기업·준정부기관 인사지침 개정 등

<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분야별 확대 목표('18년) >

△ **(공무원)** 고위공무원단 6.5%, 국가직 본부 과장급 15.7%, 자치단체 과장급 13.9%
△ **(공공기관)** 임원 13.4%, 관리자 22.9% **(교원·교수)** 국립대 교수 16.5%, 교장·교감 39.9%
△ **(군·경찰)** 여성 군 간부 6.2%, 일반경찰 11.7%, 해양경찰 12%

- 기관별 여성의 의사결정권한 평가를 위한 **「여성 대표성 지표」 개발**, 추진 애로사항이 있는 각 기관에 **컨설팅 지원**

○ 성평등한 정책결정 참여를 위해 **정부위원회 성별 참여비율 관리 강화**

*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, 「5대 국정목표」 관련 위원회 중점관리

○ **민간기업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**

- 민간기업 **인사담당자·CEO 대상 양성평등 교육** 실시 및 임원 비율 등 **통계 생산·관리** 추진

- **여성 임원 확대 및 유리천장 해소 노력**을 **기관 투자 기준**에 **반영토록 권고**(스튜어드십 코드 추진 지원)

□ 지역 여성리더 성장 지원

○ 지역 인재 발굴 및 경력 단계별 역량 강화로 **지역사회 여성리더 성장 지원**

○ **지역사회 발전**과 **성평등 확산**을 위해 **여성인재 네트워크 구축** 및 **활성화** 지원

* 여성인재아카데미 수료자 등 지역별 네트워킹 강화

2 여성폭력 예방 및 대응력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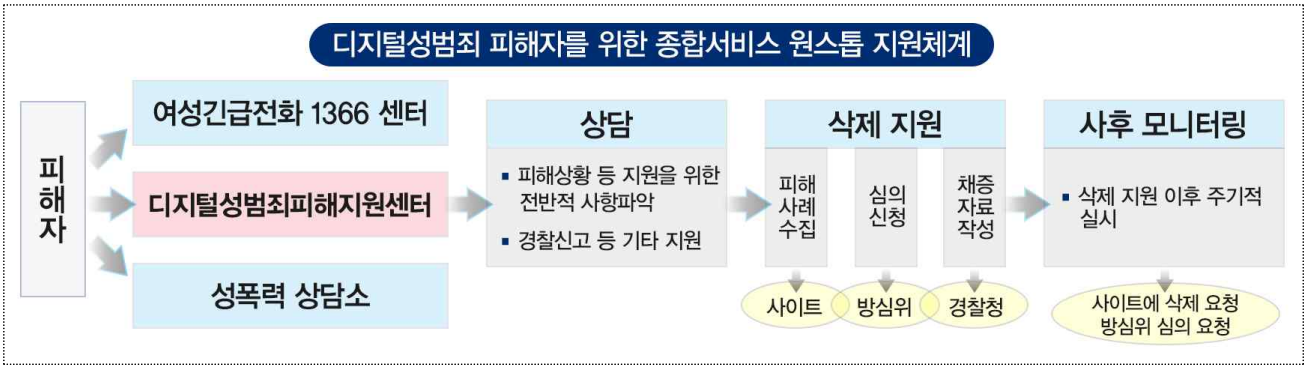
1 신속하고 강력한 여성폭력 대응체계 마련

◈ 디지털성범죄·스토킹·데이트폭력 등 여성폭력 대응 및 보호·지원체계 강화
◈ 직장 내 성폭력·성희롱 방지 및 사건처리 시스템 확립

□ 새로운 유형의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 강화

○ **디지털성범죄 특성**에 맞는 **체계적 대응** 추진

- **(처벌)** 유포범죄 가해자에 대한 **처벌 조항 신설·강화, 경제적 이득 몰수** 등을 위한 법 제·개정 추진(법무부, 행안부)
- **(유포차단) 수사기관 요청**시 방송통신심의위에서 **즉시** 영상물 **삭제·차단** 조치, **긴급심의제도 활성화**(현행 10.8일 → 2~3일, 방통위·방심위)
- **(지원)** **'상담, 수사**(채증)·**삭제·소송 지원, 사후모니터링'**까지 **원스톱 종합서비스** 지원체계 구축



- **(이행점검)**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정책 추진 및 이행강화를 위해 **'디지털성범죄 민·관 협의체*' 운영,** 새로운 이슈 및 개선과제 지속 발굴

  * (주재) 여가부 차관, (참여) 관계부처, 관련업계, 시민단체, 학계 및 전문가 등

○ **스토킹·데이트폭력** 피해자 **보호·지원**조치 강화

- **(처벌)** 스토킹범죄 처벌을 위한 법제화 및 데이트폭력에 대한 엄정한 사건 처리기준 마련
- **(현장)** 스토킹·데이트폭력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한 경찰의 현장조치 강화
- **(지원)** 피해자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 및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제공 추진

□ 직장 내 성폭력·성희롱 방지 및 사건처리 시스템 확립

○ 직장 내 **성희롱 실태 파악** 및 **상황진단**을 위한 **조사 실시**

-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에 대한 **특별조사*** **단계적 실시**

  * 예방교육 계획수립 여부, 고위직 참여율, 성희롱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

- 공공부문 및 민간기업에 대한 **성희롱 실태조사(3년 주기) 실시**

○ 성희롱·성폭력 **사건 대응력 제고** 및 **피해자 보호조치 강화**

- 「**사이버 성희롱 신고센터**」**설치 추진**, 성희롱 대응 **매뉴얼 상시 게시** 등 내용을 담은 「**성희롱·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**」 개정

- 직장 내 성폭력·성희롱 사건대응을 위한 **가이드라인 마련·배포**

  ※ 성폭력·성희롱 결정사례·판례분석을 통하여 성폭력·성희롱 해당여부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(징계수위 등)의 적정기준 제시

- **성희롱 방지조치 담당자 및 책임자**의 사건처리 **역량강화 교육 실시**

- 피해자 및 신고자(조력자) 등에 대해 불리한 처우시 공공부문 내 **기관·기관장에 대한 제재 방안 검토**

○ 공공부문 내 성폭력·성희롱 방지조치 **모니터링 강화**

- 공공기관 내 사건 발생 시 **재발방지대책**을 여성가족부 및 '주무 부·처·청, 지방자치단체'에 **동시 제출 의무화** 추진 ※ (현재)여가부에만 제출

- 공공부문 내 사건 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·추진 등에 관한 **현장점검 실시** 법적 **근거** 마련 추진

- 공공부문 내 발생사건 및 조치에 관한 체계적 데이터 수집·관리

□ 여성폭력 피해 방지 정책의 중장기 추진기반 마련

○ 여성폭력 피해사례 동향분석을 통한 '성폭력·성희롱 관련 연간 리포트' 발간

○ 다양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정책의 추진 근거가 되는 「**젠더폭력방지기본법**(가칭)」 마련

○ 여성폭력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인 「**젠더폭력** 방지를 위한 **국가행동계획**(가칭)」 수립 추진

2 여성폭력 피해자 중심의 지원서비스 내실화

◈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의 온·오프라인 접근성 제고 및 현장 역량 강화

□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에 대한 온·오프라인 접근성 제고

○ 다양한 유형의 여성폭력피해자 **지원시설 확충*** 및 서비스 **대상 범위 확대****

* 여성폭력 통합상담소(10개소→20개소), 해바라기센터(38개소→39개소), 여성폭력 피해자주거지원시설(295호→315호), 장애인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신설(1개소)

**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대상이 스토킹·데이트폭력 피해자까지 확대 등

○ **여성긴급전화 1366센터**와 **지방경찰서** 협업을 통해 피해자가 있는 경찰서로 **찾아가는 현장상담** 시범 실시

○ 실시간 채팅·카카오톡 상담이 가능한 **'여성폭력 사이버 상담' 활성화**

□ 성폭력·가정폭력 등 피해자를 위한 치유회복 및 건강 지원 강화

○ 가정폭력 피해자 진료비용 **지급절차 개선*** 등 건강 지원 강화

* 300만원 초과 의료비 지급의 경우 : (현행) 운영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 지급 → (개선) 주치의 소견서 및 내부 사례회의 등을 통해 지급

○ 디지털성범죄, 스토킹, 데이트폭력 등 다양한 유형의 폭력피해자를 위한 **맞춤형 치유회복프로그램 개발** 및 **시범 적용** 실시

□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현장 역량 강화

○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의 **효율적 운영**과 피해자 **지원 내실화**를 위해 여성폭력방지 **전담기구** 법적근거 마련 및 **기능강화** 방안 검토

○ **해바라기센터** 피해자 지원서비스의 질적 제고 및 기능 강화를 위해 **센터 평가** 및 **컨설팅** 실시

3 예방교육 실효성 제고 및 홍보 강화

◈ 맞춤형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및 거버넌스를 통한 폭력예방 활동 내실화

□ 여성폭력 예방교육 실효성 제고

○ **(공공부문) 폭력예방교육 이행 점검 강화** 및 질적 제고를 위한 **지원 확대**

- 기관장 교육 미이수, 고위직 참여율 50%미만 기관을 **부진기관으로 추가 관리하고 이행계획서 제출 등 후속조치 강화***

  * '관리자 특별교육, 기관명 언론공표'에 '예방교육 이행계획서 제출' 추가

- **예방교육 품질 제고**를 위해 **맞춤형 콘텐츠**를 **개발·보급**하고, 역량별 강사양성과정 개발과 강사 DB 구축

○ **(일반국민)** 여성폭력 예방교육 **필요 분야 발굴** 및 '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' **적극 지원**

- 가족친화기업, 소규모 기업 등 민간기업 내 인사담당자를 위한 **폭력예방교육 콘텐츠 제공** 및 **전문강사 연계** 지원

- 성인지적 관점 이해, 여성폭력에 대한 감수성 제고를 위해 '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'에 **'양성평등 교육'** 비중 강화

□ 여성폭력 근절에 대한 사회공감대 형성을 위해 민관 협업 강화

○ **민간**의 성폭력·성희롱 피해사실을 알리고 대책을 촉구하는 **캠페인** 또는 피해자의 **자조**모임·**활동 지원**

○ **아동·여성 안전지역연대***를 통한 지역 맞춤형 안전프로그램 확산 등 **지역사회 아동·여성 폭력예방 활동 내실화**

  * (지역연대) 아동·여성 보호를 위해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의 교육·경찰·사법·의료기관, 아동·여성보호시설 등이 참여하는 민·관 협력체계(243개 구성)

○ 보라데이(매월 8일), 여성폭력 추방주간* 계기 **민관합동** 여성폭력 **예방캠페인** 및 홍보 실시

  * 성폭력 · 가정폭력(11.25~12.1) 및 성매매(9.19~9.25) 추방 주간

4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강화

◈ 랜덤채팅앱을 통한 성매매 피해방지 환경 조성
◈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 특수성에 맞는 방지 조치 및 지원 추진

□ 랜덤채팅앱을 통한 성매매 피해방지

○ 성매매에 노출된 청소년을 위한 사이버 상담·지원 및 온라인 성매매 유인·권유 의심정보에 대한 모니터링·신고 활성화

○ 랜덤채팅앱을 이용한 **아동·청소년** 성매수 유인행위에 대한 **상시 단속 체계 구축** 및 집중단속 강화

□ 성매매청소년 피해자의 특수성에 맞는 전담 지원 추진

○ 성매매의 **대상**이 된 **아동·청소년**을 **피해아동·청소년**에 **포함***하고, 개별적 특성과 사례에 적합한 **맞춤형 지원 방안** 마련

*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개정 추진

○ 청소년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**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***(7개소) **지정·운영**

* 상담(현장방문, 거리상담, 사이버), 보호지원(일시보호, 치료회복, 의료·법률지원), 자립지원(생활정보 제공, 진학교육, 직업훈련 등)으로 건강한 사회복귀 유도

○ 성매매피해청소년의 **성매매 재유입 예방**을 위해 성매매바로알기, 자존감 향상, 심리치유 등의 **맞춤형 교육**(40시간) 실시

□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 강화

○ 재범방지를 위한 **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적용기준** 및 **운영 가이드라인 마련·제공**(경찰청, 아동·청소년 관련 기관 등)

- 아동·청소년 관련 기관 성범죄자 취업여부 **일제 점검 추진**(관계기관 합동)
- 취업제한제도 교육·홍보 등 제도의 **조기정착** 및 **효율적 운영**

○ 성범죄자 신상정보 **공개·고지의 정확성** 및 **실효성***을 높이고, **신상정보공개 대상 범위 확대**** 추진

* 국민 누구나 오류정보 발견시 정정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
** (현행)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 → (변경)아동·청소년대상(19세 미만) 성범죄자

5 일본군‘위안부’피해자 명예와 존엄회복 및 생활안정 지원

◈ 전시 하 여성인권 연구를 위한 기반사업 및 기념사업 내실화

□ 일본군‘위안부’피해자 문제 관련 연구·조사 및 교육·홍보사업 체계화

○ **「일본군‘위안부’ 문제 연구소**(가칭)**」 발족**으로 체계적 조사·연구·교육 추진기반 마련

* 「**역사관·연구소 설립 관련 기초연구**」를 통해 통합적 조사·연구 및 교육·홍보사업 수행을 위한 체계적 기반 마련 추진

○ 일본군‘위안부’피해자 **e-역사관을 개편**하여 전문성 있는 콘텐츠 확산

* **다국어 페이지** 추가 구성 및 e-역사관 **개편방안 모색**으로 일본군‘위안부’ 피해자 문제에 관한 기록을 전 세계에 **확산·공유**

□ 일본군‘위안부’피해자 명예와 존엄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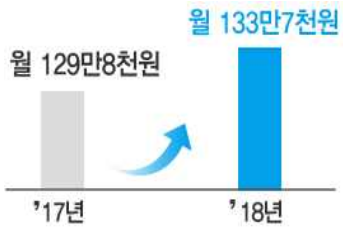
○ **‘피해자 중심주의’** 원칙하에 **일본군‘위안부’피해자** 및 **관련 단체**(중앙·지방)와의 **소통 강화**

○ **일본군‘위안부’피해자 기림의 날**(8.14) 관련 **기념행사** 실시 및 국립 망향의 동산 내 **추모비 제막식** 개최

○ ’위안부‘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 지원을 위한 **국외전시 등 민간단체 사업 지원** 및 **국내전시 확대**(’17년 4개 지역 → ’18년 6개 지역)

□ 일본군‘위안부’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확대

○ **생활안정지원금** 및 **간병비, 건강치료비 등 지원 금액 확대**

생활안정지원금(1인)	간병비(1인)	건강치료비(1인)
		

○ 호스피스 의료비 지원을 **요양을 위한 의료기관 입원·방문치료비 지원으로 확대**(1인당 월평균 660만원) 및 **장제비 상향**(2백만원→3백만원)

3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

1 가족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

◈ 취약가정 중심에서 모든 가족으로 서비스 대상 확대
◈ 위기가족에 대한 사전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

□ 취약가족 위주에서 보편적·통합적 가족정책으로 전환

○ 가족정책의 대상과 기능변화에 따른 **핵심 추진과제 발굴 및「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**('16~'20)」 **보완**

* (주요내용) 독거 중년 남성 및 여성노인 등 1인 가구의 사회안전망 강화, 비혼 동거가구 등 가족유형에 따른 자녀양육 차별해소 방안

○ **가족서비스 전달체계 일원화**로 지역사회 가족돌봄 허브기능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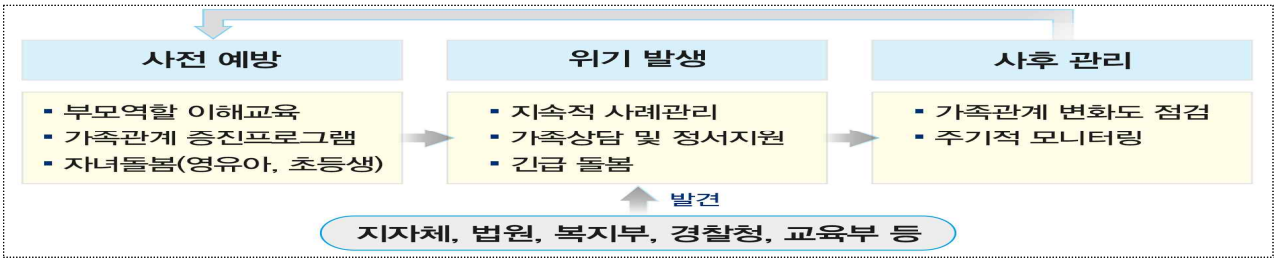
- **보편적 가족서비스 접근성 제고**를 위한 **통합센터 단계적 확대**
- 지자체, 학교, 지역아동센터, 방과후아카데미 등 지역 내 돌봄지원 기관간 연계·협력(돌봄협의체 구성 등)으로 **돌봄의 사각지대 보완**

○ 범시민 참여를 위한「가족시민회의(가칭)」 등 개최로 가족 정책에 대한 체감도 제고

□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한 위기가족 지원체계 강화

○ **아동학대** 등 **위기가족 조기발견**, 가족 **특성별 맞춤형 서비스**(긴급돌봄·가족상담 등) **및 사후관리 제공**

* 취약·위기가족 지원 : ('17년) 47개소(52천건) → ('18년) 61개소(60천건)



○ 자녀 체벌 등 아동학대 및 가족 갈등 예방을 위해 **생애주기별·가족특성별 부모·자녀간 관계 개선 교육**(사이버·집합) **확대**

※ '17년 개발된 생애주기별 부모역할 이해교육 교재(동영상·PPT 등) 및 전문 강사 활용

○ 자녀양육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청소년 한부모 등을 지원하는 **'좋은 청소년부모**(Good Kidarent) **프로젝트'** 추진(시범운영)

* 출산부터 자녀양육까지 상담·부모역할 이해교육·아이돌봄 지원 등 종합 사례관리

2 지역사회 중심 돌봄 공동체 활성화

◈ 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을 다양화하여 **맞벌이가정 돌봄 지원**
◈ 아파트, 작은 도서관, 주민센터 등을 활용하여 읍면동 마을생활권 단위로 확대

□ 「공동육아나눔터」 등 온종일 돌봄서비스 확대로 돌봄기능 강화

○ 맞벌이가정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「**공동육아나눔터**」**시범운영** 및 **단계적 확대**

○ 지자체는 돌봄공간 확보, 기업은 공간 리모델링 지원, 부모가 참여하는 「운영위원회」 구성으로 **민·관 거버넌스 협력 모델 구축**

○ 전방부대 군인가족의 독박육아 해소 등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「**군관사 공동육아나눔터**」 **지속 확대**(국방부 협조)

* 군관사 공동육아나눔터 : ('17년) 12개소 → ('18년) 16개소 → ('22년) 42개소

○ 돌봄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「**방과후아카데미**」 **확대** 및 운영시간, 규모, 형태 등 **다양화 모델 시범운영 추진**

* 주말형, 야간형, 인원축소형, 방과후학교연계형 시범운영 및 개소수 확대 ('17년 250개소 → '18년 260개소)

□ 이용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마을생활권 단위로 나눔터 공간 확산

○ 아파트 주민공동시설, 작은 도서관, 주민센터 등 **공공·민간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**하여 읍·면·동 단위로 확대 추진

○ 일정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내에 나눔터 공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추진(국토부 협조)

□ 품앗이 참여 부모, 경력단절 보육교사 등을 돌봄 보조인력으로 활용하여 경력단절 및 중고령 여성의 일자리 창출 추진



3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로 육아의 국가책임성 강화

◈ 아이돌봄 지원 강화 및 아이돌보미 처우개선
◈ 아이돌봄 서비스 대기수요 해소 및 서비스 확대

□ 맞벌이·한부모 등 이용가정의 양육부담 완화

○ 중위소득 120% 이하 가정에 아이돌봄 **지원비율 상향***

* ('17년) 25%~75% → ('18년) 30%~80% (각 5%p 인상)

○ 중위소득 120% 이하 가정에 시간제 아이돌봄 **정부 지원시간 확대***

* ('17년) 연 480시간(1일 2시간) 이내 → ('18년) 연 600시간(1일 2.5시간) 이내

□ 아이돌보미 대기수요 해소 및 서비스 다양화

○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**집중시간대**를 **설정**하고, **해당 시간대**에 **아이돌보미 우선 투입**으로 대기수요 해소

* 등·하원 또는 등·하교 시간에 활동할 수 있는 아이돌보미 확보 및 즉시 매칭으로 대기가정 축소

○ 보육시설, 학교 등 기관에 아이돌보미 파견 및 **1:多 서비스 제공*** 으로 이용가정에게 다양한 서비스 선택권 부여

* (예) 아이돌보미 1인이 이웃가정 자녀와 함께 가정 내 돌봄을 제공(최대 3인)

○ 지역별 맞춤형·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**공공서비스 관리체계 구축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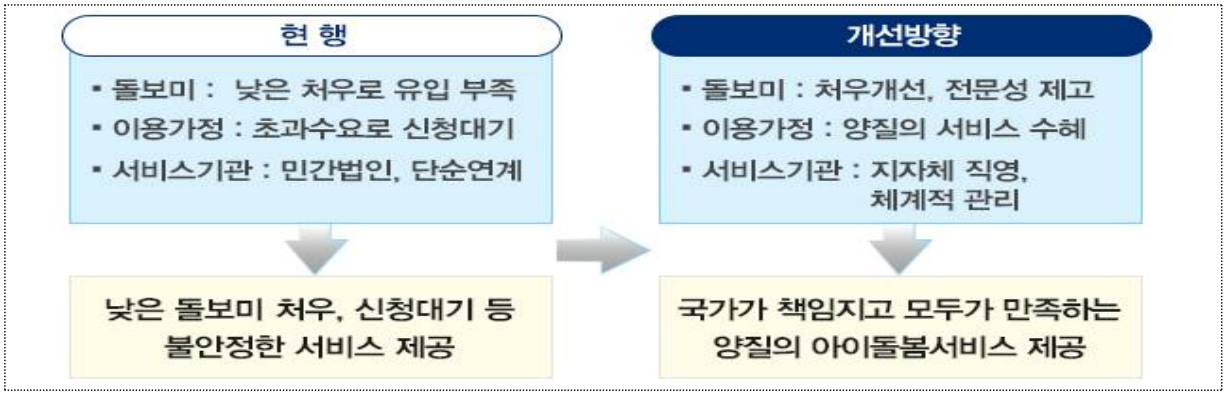
* (현행) 비영리법인 지정·운영 → (개편안) 지자체 직접 설치·운영

□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및 전문성 제고

○ 돌봄 수당 지속 인상* 등을 통해 **아이돌보미 처우를 유사 돌봄 서비스 수준****으로 개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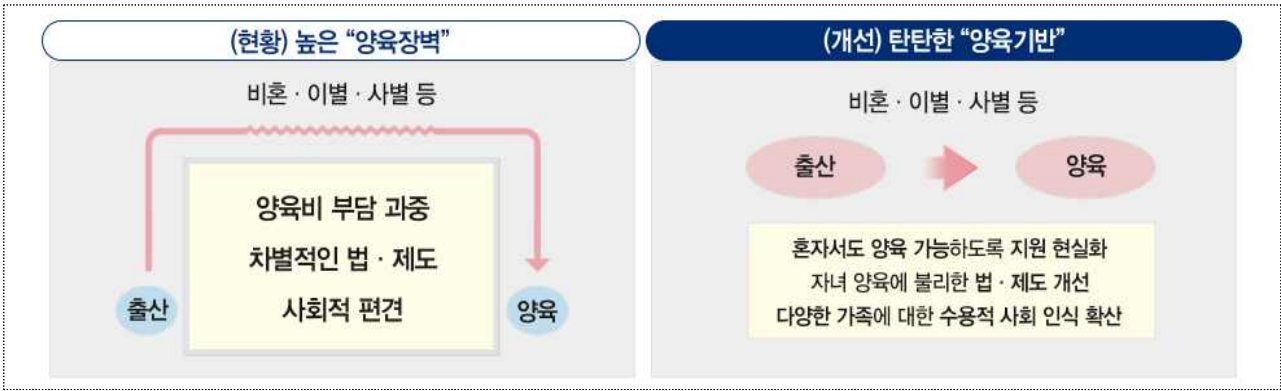
* 시간당 돌봄 수당 : ('17년) 6,500원 → ('18년) 7,800원(20% 인상)
** 노인돌봄·장애인활동보조 등은 약 8,070원 이상

○ 양성·보수교육 내실화, 결격사유 확인 등 **아이돌보미 자격관리** 강화



4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 양육 및 자립지원 확대

◈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인상과 지원 연령 상향으로 양육여건 개선
◈ 한부모·미혼모 등 초기 상담부터 자립까지 통합적 지원 및 상담서비스 확대



□ 한부모·미혼모 자녀의 안정적 양육 지원

○ **저소득 가정의 자녀 양육을 위한 지원 현실화**

- 비혼모·한부모 가족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**양육비 정부지원 확대**

  * ('17년) 만 13세 미만, 연 144만원 → ('18년) 만 14세 미만, 연 156만원 → ('22년) 만 16세 미만, 연 180만원

- 긴급지원이 필요한 한부모 자녀를 위한 **한시적양육비 지원 범위 확대 검토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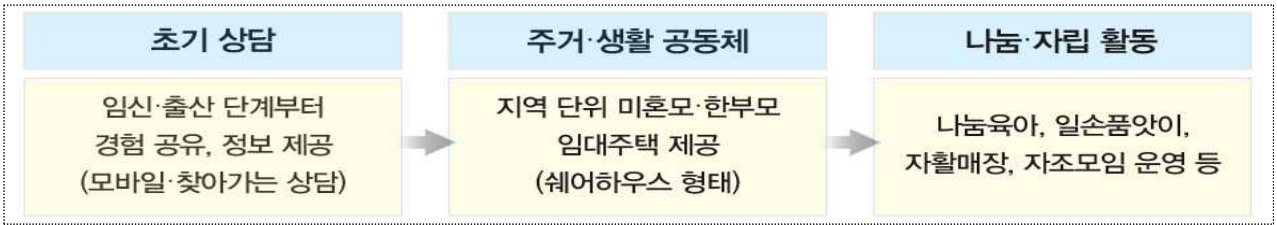
- **한부모 가족 지원대상 확대***를 통한 비급여성 지원 강화

  * 중위소득 52%에서 60%로 상향(청소년한부모 가족은 60%에서 72%로 상향)

  ※ 자녀 대학특별전형, 공직채용할당, 전기·통신 등 각종감면 실질적 혜택부여

○ **미혼모** 등에게 **초기 상담부터 자립까지 통합적 지원**

- 미혼모·한부모 당사자가 주도하는 **'스스로 돕는 한부모 프로젝트'** 시범 추진



- 학업·취업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**검정고시 학습비**(학용품비 포함) **및 자립촉진수당 지원**

□ **한부모·비혼 가정 등 자녀 양육비 이행지원을 위한 법·제도 개선**

○ **비양육부모 양육비 이행 책임성 제고**로 **양육부담 완화**

- **소득·재산 조사절차 간소화** 등 양육비 이행 제도 실효성 확보
  * 양육비 이행율 제고 : ('17년) 33.0% → ('18년) 34.5%
- 불이행 시 감치처분 등 **제재조치 강화** 추진(법무부 등 협조)
  * (현행) 3개월 미지급 시 감치처분 가능 → (변경) 1개월 미지급 시
- 안정적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**전담기관 기능 강화** 및 **대지급제 도입** 검토

○ 자발적 양육비 이행 위한 **면접교섭 실행 매뉴얼 개발·보급**

※ 면접교섭 경험이 있는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률 55%('16년 전체 이행률 31.6%)

□ **임신·출산·자녀양육 관련 상담서비스 확충**

○ **법원과 연계를 강화**하여 **이혼 전·후 가족상담 서비스 확대 추진**

- 이혼자녀 정서안정 및 양육책임 강화를 위한 지역단위 전문상담 체계 구축 및 상담 확대
  * 수행기관(건가센터 등) : ('17년) 7개소 → ('18년) 9개소 → ('22년) 전국 확대

○ **비혼 임신여성** 상담매뉴얼 개발 및 **상담서비스 시범 실시**

- 임신·출산·양육관련 정보제공, 상담 및 건강서비스 연계, 사후관리 등

□ **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**

○ 한부모 가족 인식 개선을 위한 「**한부모 가족의 날**(5.10)」 **제정**

○ **비양육부모의 양육책임 의식 강화**를 위한 **캠페인*** 전개
  * 양육비 이행 실천 우수사례 웹드라마 제작, 대학생 등이 참여하는 SNS 홍보단 운영

○ 혼인 외 출산·양육에 대한 **차별적 제도 발굴·개선** 추진

○ 다양한 가족 **편견·차별 예방**을 위한 **자조모임 및 단체 활동 지원***
  * 다양한 가족 인식 개선 공론화 및 사회적 합의의 장 제공

5 다문화가족 인권보호 및 참여 확대

◈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및 현지 사전교육 상담 확대 등으로 인권보호 강화
◈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을 위한 결혼이민자, 자녀 대상 지원서비스 확대

□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강화

○ 폭력피해 이주여성 **쉼터 확대** 및 **외국인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입소를 허용**하도록 **제도 개선**

※ (쉼터) : ('17년) 26개소 → ('18년) 28개소

○ 불법 국제결혼중개 적발 등 **현지 인권보호 감시체계** 및 **결혼이민 예정자 대상 현지사전 교육**(베트남 3개소, 필리핀 1개소) **강화**

※ 현지사전교육 : ('17년) 집합 교육 → ('18년) 다양한 형태의 상담 서비스 추가

○ **다국어 전화상담(다누리콜센터) 24시간 지원**을 통해 폭력피해 결혼이주여성 긴급구출 및 보호시설 연계

□ 다문화가족 정책 추진체계 강화

○ 부처 간 정책연계를 통해 **다문화가족정책 상시 협력체계 강화**

* 초기적응, 사회참여, 인권보호, 인식제고 분과를 중심으로 실무협의체(10개 부처) 운영

○ 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 다문화가족이 주체적으로 **참여하고 소통**할 수 있도록 **다문화가족 정책참여 거버넌스 확대**

* 다문화가족 참여회의 : ('17년) 5개 권역별 10인 → ('18년) 각 시·도 16인 위촉

○ 「제3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('18~'22)」 **과제별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**으로 유사중복사업 점검 및 특화사업 발굴 추진

□ 다문화가족 지원 사각지대 발굴 및 개선

○ **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** 내 **다문화가족**에 대한 **차별사례** 및 **지원 사각지대 발굴**을 위한 연구추진

○ **다문화 가족**을 둘러싼 **정책 환경 및 수요**에 대한 **실태조사 실시**

* (국내)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및 일반 국민대상 다문화 수용성 조사

□ **다문화가족 사회참여 활성화**

○ **다문화가족지원센터** 등을 통한 정착 단계별 **맞춤형 서비스 강화**

- 한국어 교육, 통·번역, 멘토링, 사례관리 등 **초기 정착지원 서비스 내실화**

- 결혼이민자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**'자립지원패키지' 확대 운영**

○ **기관 간 협업**으로 결혼이주여성 **취업지원서비스 연계 활성화**

* 결혼이주여성 취업희망정보 새일센터 제공 및 다가센터 종사자 취업연계 교육 강화

□ **다문화가족 자녀를 미래인재로 육성 추진**

○ **이중언어 인재 발굴 확대 및** 국제교류 프로그램 연계 지원

○ 리더십 개발 및 정체성 회복, 사회성 발달, 미래설계 등을 종합 지원하는 **다문화청소년 성장프로그램 확대**

○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적응을 돕는 찾아가는 **자녀생활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**

* (현행) 만12세 이하 아동 → (개선) 연령과 무관하게 초등학교 재학 중 아동을 포함

○ **중도입국청소년** 초기정착 지원 및 진로지원 강화

- 평일·전일제, 주말·야간, 방과 후 등 한국어교육(레인보우스쿨) 실시

- 한국 공교육 편입학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강화

※ 다누리포털 등 이주민 커뮤니티를 통한 매뉴얼 및 홍보물 배포 등

□ **차별 없는 다문화사회 조성을 위한 교육 강화**

○ **유치원 및 초·중·고 교원**에 대한 **다문화 이해교육 의무화**

※ 교원 자격·직무연수 과정에 다문화 이해교육을 포함하도록 관련법령 개정('18년)

○ **주민센터, 출입국사무소 등 대민서비스 종사자**에 대한 교육 강화

○ 다문화 이해교육 **대상별 맞춤형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·확대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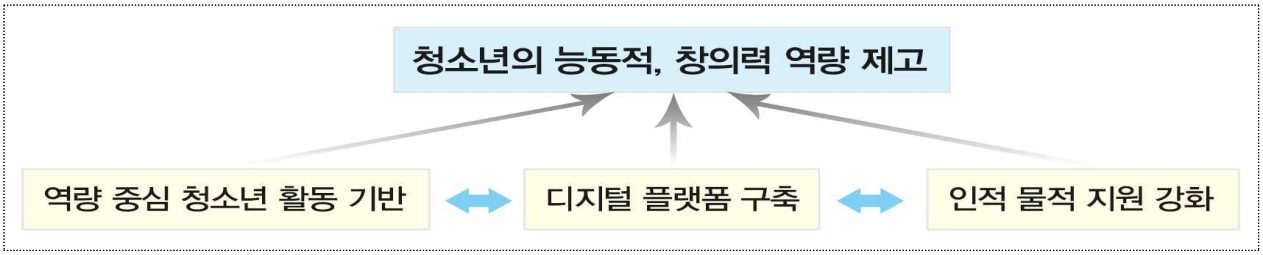
※ ('17년) 6종(성인, 청소년, 교육자, 시설종사자, 직장인, 유아용) → ('18년) 8종(경찰, 군인용 추가)

4 청소년의 역량강화와 균형있는 성장

1 청소년 활동 및 성장지원 기반 혁신

◈ 4차 산업혁명 시대, 다양한 역량 개발로 창의적·융합 인재 양성
◈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활동으로 전환 및 디지털 플랫폼 기반마련

□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역량 제고를 위한 청소년활동 환경 조성



○ 청소년 역량제고를 위한 **활동프로그램 모델 개발** 및 **시범운영**

- 민주시민학습활동, 사회정서학습활동 등 주요활동 영역별 시범 추진

○ **'디지털플랫폼'**을 통한 청소년활동 성과의 집적 및 공유 기반* 마련

* '청소년국제교류네트워크' 활용 글로벌 활동 지식공유 기반 시범운영('18년)

○ 환경변화에 따른 **맞춤형 교육**(자격연수, 보수교육)으로 청소년지도사 **역량**을 **강화**하고, 청소년 **활동 공간 확충***

* 생활권 수련시설 확대(수련관 15개, 문화의집 34개) 및 특성화국립수련시설 (청소년생태센터(부산 을숙도) 및 산림센터(경북 봉화)) 건립 착공

□ 청소년이 만들고 실행하는 참여활동 활성화

○ 지역별·분야별 **다양한 문화 활동 기반** 마련

- 스스로 구상하고 실행하는 「**시·도 청소년어울림마당 기획단**」 구성·운영
- **지역동아리연합회 활동 활성화**로 다양한 영역의 활동 참여 확대

○ 청소년이 **지역사회 문제해결**의 **주체**가 되는 **참여형 활동** 강화

- 청소년이 기획하는 **자기주도형 자원봉사 활동으로 전환***

* ('17년) 4개 지역에서 시범운영 → ('18년) 전국으로 시범운영 확대 추진

- 다양한 문제해결*을 위한 프로젝트 참여활동 지원 확대('17년 50개 → '18년 75개)

* 지역사회개발, 세대간 통합, 청소년권익개선 등

□ 국내외 청소년 교류 다각화를 통한 글로벌 역량 제고

○ 국내 체류 유학생과의 교류 확대로 상호 이해도 및 친밀감 증진

- 민주시민의식 공유, 성평등 프로그램, 친밀한 프로젝트 활동 등 국내 대학 기반 실질적 교류 모델 추진(시범운영)
- 체류 유학생 대상 국가를 중국 포함, 제3세계 국가로 확대

  * ('17년) 한중 청소년 교류지원사업 시범 운영 → ('18년) 다국가 교류로 확대

○ 국제청소년 포럼을 통해 청소년 주도형 글로벌 네트워킹 추진

- 분야별 글로벌 테마 선정(환경, 성평등 등), 전문대표단 파견 등
- 국제적 이슈를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교류 프로그램 확대

□ 청소년활동 공간의 기능 다각화 및 이용 활성화

○ 청소년시설(수련관, 문화의집 등)을 **청소년활동의 허브**(청소년센터)로 **개편**

- 청소년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**'청소년 자유공간'** 설치·운영 활성화
-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**청소년시설의 활용성 제고**

○ 청소년수련시설 **종합 안전점검 분야 확대*** 및 **추진체계 개선**

  * ('17년) 건축, 토목, 기계, 소방, 전기, 가스 → ('18년) 위생 분야 추가

○ 청소년 수련활동 안전보장을 위한 **종사자 교육 강화**

- 찾아가는 안전교육 및 수련활동신고 제외법인(종교단체, 비영리법인·단체 등)에 대한 온라인 안전교육 확대운영

□ 2023 세계잼버리 성공적 개최를 위한 체계적 기반 마련

○ 세계잼버리 지원 근거를 담은 **특별법**(안) **마련 등 제정 추진**

- 기반시설 구축 지원, 안전대책,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포함

○ 연도별 추진일정, 세부 실행방안을 담은 「**세계잼버리 개최 종합계획***」 수립

  * 잼버리 주요 영내·영외 프로그램(안), 대회 운영시스템 구성방안 등

2 청소년의 진로찾기 지원 강화

◈ 청소년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진로지원 강화

□ 청소년의 진로탐색 등 진로지원 프로그램 강화

○ 학교 밖 청소년의 **자존감 증진 및 자립 동기 부여**

- 문화·예술·체육프로그램, 인문교육 기회 통해 **사회·정서적 지원 강화**
- 진로·적성검사, **직업체험 기회 제공 등 진로 지원 확대**

○ 지역단위 청소년상담복지센터* 활용, 청소년기 발달과정에 맞는 전문 진로상담 및 진로설계 코칭 강화

* 진로 관련 심리검사,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

□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취업지원 확대

○ 기초 직업훈련, 직장체험(인턴) 과정 지원으로 동기부여 및 취업의지 고취

※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지역 : ('17년) 7개 지역 → ('18년) 8개 지역

○ 학교 밖 청소년 취·창업 기반조성

- '창업동아리' 중심으로 기업가 정신 함양 및 창의인재로의 성장 지원

* 비즈쿨(중기부 협력) : 청소년 대상 창업·경제교육, 창업동아리, 전문가 특강 지원 등

- **(예비)사회적기업 설립 지원***으로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

* 사회적기업 양성교육-인큐베이팅 코칭으로 '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인증' 지원

○ **전문직업훈련 제공을 위한 내일이룸학교**(10개소) **운영 개선**

- 단기과정 개설, 소통창구 마련 등 **청소년 친화적인 직업훈련 추진**
- 심리상담, 검정고시 지원 및 자립장려금·교통비 지원 등 **취업동기 제고**

○ 학교 밖 청소년의 접근이 용이한 직업군 등 **훈련과정의 다양화**

-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**'기업 맞춤훈련 과정' 운영, 훈련 수료 후** 해당 기업으로 취업연계 지원
-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·수요를 고려한 직업군 개발로 훈련 효과성 제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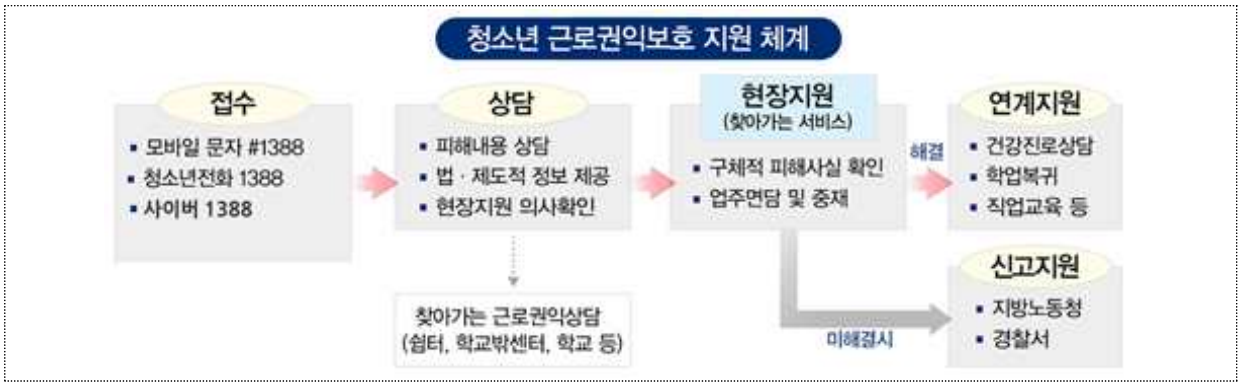
3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

◈ 청소년 근로권익 침해를 근로현장에 찾아가서 직접 해결 지원

□ 아르바이트 현장의 근로권익 피해 예방·구제를 위한 '청소년 근로 현장도우미' 연계 지원

* ('17년) 서울·수도권 일부(5명) 시범사업 → ('18년) 서울·중부권, 충청·전라권, 경상권(21명)

○ 현장도우미가 현장을 방문하여 근로상담 및 피해사실 확인, 업주와의 **면담·중재**를 통해 신속한 **문제해결** 지원



○ **찾아가는 근로권익 상담***을 통한 사전예방적 정보제공·현장지원 연계 및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지원 **전문성 강화**

* 청소년 쉼터,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, 중·고교 등 400여개 기관

○ 근로청소년의 상황에 맞는 **종합적인 연계서비스 지원**

- **청소년의 근로 사유 및 여건**을 파악, 청소년 관련 기관*의 종합적 서비스(건강·진로상담, 학업복귀, 직업교육 등) 연계·지원

* ('18년) 청소년상담복지센터(226개소),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(206개소) 등

□ 근로현장의 청소년 권익 보호 및 최저임금 점검 강화

○ **민관협력**을 통해 **최저임금 준수** 등 **청소년 근로보호**를 위한 **안내** 및 **캠페인** 상시 추진

※ 전국 270개 단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(단원 1만8천여명) 지정·운영

○ 여성가족부, 고용노동부, 지자체, 지역 경찰이 합동으로 노동관계법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 **근로 점검** 실시(연2회)

※ 방학기간 중 편의점, 일반음식점 등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(전국 50개 시·군·구)

4 위기청소년을 위한 촘촘한 안전망

◈ 지자체 중심의 지역 단위 콘트롤 타워 기능 확대로 위기 대응력 제고
◈ 아웃리치(거리·사이버) 활성화로 사회안전망과의 연결 강화

□ 위기청소년 조기발견, 현장중심 서비스 강화

○ 지역사회 중심의 **틈새 없는 통합서비스 제공 및 지원 내실화**

- 범정부 협업체계 강화와 지자체 중심의 **지역 단위 콘트롤 타워 기능 확대**로 위기 대응력 제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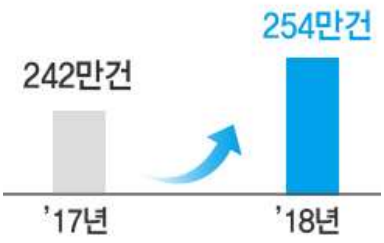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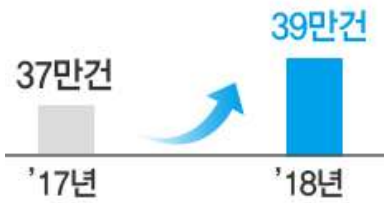
  * 학교안팎의 청소년 폭력이나 위기 사안이 **지역사회 현안문제로 확대시 협의체 작동**

- 다수 기관의 협업이 필요한 고위기 청소년에 대해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(CYS-Net)가 **우선 지원 및 사례관리** 실시

  * 청소년동반자 : ('17년) 1,146명 → ('18년) 1,261명

- 인터넷, 스마트폰 등 매체환경 변화에 맞게 **1388 청소년상담채널** (전화·문자·사이버) **운영 개선**

- 가출 등 위기청소년 보호·지원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

< CYS-Net 지원서비스 >	< 아웃리치 서비스 >
	

○ **가출 등 위기청소년 복지사각지대 적극 해소**

- 사회안전망과의 조기 연결을 위한 현장 **아웃리치**(거리·사이버) **활성화**

  * ('17년) 15개 쉼터(아웃리치센터) 30명 → ('18년) 30개 쉼터 60명(+30)

  * 거리상담 및 긴급지원 현장활동 시 지역 내 경찰, 유해환경감시단 등과 연계 강화

- 비행 예방 및 회복 지원을 위한 자립 및 생활지원 서비스 개선

  * 소년법 처분(제1호) 청소년을 위한 **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내실화** 및 일부 **청소년쉼터의 기능 전환** 지원

□ **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**

○ 관련부처·청소년 지원기관과 협력하여 학교 밖 청소년 **정보 연계 및 지원 강화**

- **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프로그램 학력인정**으로 학력취득 지원
-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**접근성 제고**를 위한 **인프라 확대***

  *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: ('17년) 202개소 → ('18년) 206개소

○ 비행·일탈 경험을 가진 학교 밖 청소년 보호·지원 강화

- **청소년동반자**와의 **연계**를 통한 전문 상담서비스 제공
- **조건부 기소유예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**

○ 지역특성을 반영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모델 개발

□ **비진학, 미취업 후기 청소년(19~24세) 사회진출 지원**

○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(CYS-Net) 활용, 후기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방안* 강구

  * 무업(NEET) 및 은둔형 취약계층 발굴, 지역 사회안전망 연계 강화

○ 시설(청소년쉼터 등) 입소기간 만료 후 갈 곳 없는 후기 청소년에게 **주거 우선 지원***(청소년자립지원관)을 통해 **위기의 회전문 현상 차단**

  * '18년 4개소 최초 국비지원, 생활시설이 아닌 주거·자립지원 기반으로 운영

□ **매체 역기능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**

○ 인터넷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치유지원 강화

- 가족치유캠프, 부모교육 확대로 초등 **저연령층 과의존에 적극 대응**
- 중·고생 청소년 대상 과의존 정도별 **맞춤형 기숙치유서비스 확대***

  * 상설치유기관(인터넷드림마을) 프로그램 : ('17년) 14회 400명 → ('18년) 22회 600명

- **과의존의 성별 특성**을 고려한 **여성 청소년 치유캠프* 운영 확대**

  * 여성 청소년 치유캠프 운영(드림마을·인터넷치유캠프) : ('17년) 11회 → ('18년) 14회

○ 인터넷상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**점검·단속 강화**

- 인터넷신문 광고의 **청소년유해성 심의 추진** 및 **모니터링 확대***

  * ('17년) PC버전 6,090개 → ('18년) PC 및 모바일버전 12,000개

- 인터넷 개인방송, SNS 등을 통한 **유해정보의 청소년 대상 유통 차단**

  * 청소년유해영상물 성인인증 조치 점검 : ('17년) 16,000여개 → ('18년) 25,000여개

5 청소년 민주시민 역량 제고와 지자체 청소년 정책 활성화

◈ 청소년이 사회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정책 활성화
◈ 지자체의 청소년 정책 전문성 제고

□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를 통한 권리실현

○ 청소년 참여기구 대표성 및 역량 제고

- 청소년 **참여기구 위원구성**을 공개모집 위주에서 학교추천(학생회 대표), 청소년 직접선거 등 **다양화하여 대표성 강화**

※ 위원 구성 과정 자체가 청소년의 민주시민학습의 과정이 되도록 운영

- 정책제안 후, 청소년이 **스스로 실천**하고, **과정을 공유**하는 활동 강화

※ 참여활동과정 : 문제발견 → 해결방법 조사 → 대안제시 → 실천 및 공유

○ 청소년참여예산제, 청소년이 주도하는 토론회·포럼 등 **지역사회 청소년 참여정책 활성화***

* 참여활동 매뉴얼, 청소년 주도의 조례 제정 사례 등 확산('18년)

- 지자체 청소년참여위원회에 청소년 권리 등 모니터링 기능 확대*

* ('17년) 청소년정책 제안 → ('18년) 청소년 권리 등 모니터링·개선제안 기능 추가

□ 성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강화

○ 청소년의 **양성평등 의식 함양**을 위한 **프로그램** 확산

- 청소년수련시설의 양성평등 교육 컨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제공
- 청소년지도자 대상 양성평등 의식 교육 강화
- 청소년 성문화센터(전국58개)를 통해 성 인권 가치관 및 폭력예방을 위한 전문 성교육 제공

○ **성별 차이를 고려한 접근**을 통해 사회적 위험 해소

- 청소년 상담복지 서비스·프로그램에 **성차별 감수성** 및 **민주시민 의식**을 강화하는 콘텐츠 반영
-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**특성화 직업훈련과정**(내일이룸학교) 운영
- 여성근로청소년 **성희롱 피해 등 여성폭력**에 대한 맞춤형 상담 및 통합지원 연계(해바라기센터)

○ **여성청소년 건강지원 사업 내실화**

- 여성청소년이 **정서적 어려움 없이 위생용품을 지원**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 방식 **지원*** 추진

  * 중위소득 50%이하 만11～18세 이하 청소년 대상으로 **바우처 카드**를 발급하여 **개인이 선호하는 위생용품 구매 가능**

※ (상반기) 전자바우처 시스템 구축, (하반기) 바우처 카드를 통한 구매비용 지원

- 학교 밖 여성청소년 건강검진 시 **산부인과**(자궁경부세포검사) **선택검진 추가** 지원

□ 지역단위의 청소년 성장 지원 통합 모델 개발

○ **'청소년 성장·지원 혁신 지역'** 통합 모델 개발 및 시범실시*

  * 대도시형, 중소도시형 등을 선정하여 시범 운영(연구용역)

○ 지자체별 **청소년활동과 상담복지**를 **수요자가 종합적**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 개편 추진

- 지자체 여건에 따라 '완전 통합형'*, '부분 통합형', '개별형'으로 자율적 개편 유도

  * 청소년수련관, 청소년문화의집,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기존의 모든 인프라를 청소년센터로 '완전 통합' 또는 일부 시설만을 '부분통합'하거나 '개별' 운영

  * '청소년 성장·지원 혁신 지역'에서 통합형 시범 운영 등 검토

□ 현장중심의 청소년정책 역량 강화

○ 청소년지도자 교육 강화, **자격제도 개선** 등 **지도자 역량 제고**

-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과정 마련 및 현장 경험 중심의 자격제도 개선 추진

○ 청소년시설 등 광역·기초 단위 **전달체계의 역할 명확화** 및 재정립 추진

○ 청소년정책 담당 및 지자체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확대를 통한 전문성 강화

붙임 **2018년, 이렇게 바꾸겠습니다.**

분야	주 요 내 용
여 성 분 야	**1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추진체계 개편으로 사회 전반의 성평등 수준 제고** ○ 양성평등 정책 총괄·조정을 위한 **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** 등 **단계적 추진**, 부처별 성평등 실행 목표 등 **양성평등 정책 실행력 강화** ○ **청년여성·남성과 함께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**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**여성이 살기좋은 사회 조성** 등 **성평등 가치 확산** * 청년이 함께하는 여성정책 추진단, 5대 권역별 '성평등보이스' 출범 등 ○ **문화·예술·교육 분야「10대 성평등 체감 프로젝트」 추진**
	2 공공·민간에서의 여성의사결정권한 강화 ○ **「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**('18~'22)**」 실행 원년**으로 차질 없는 계획 시행 ○ **여성고위공무원단 및 공공기관 여성임원 목표제 최초 도입** * 여성고위공무원단 : ('17년) 6.1% → ('22년) 10% * 공공기관 여성임원 : ('17년) 11.8% → ('22년) 20% ○ **민간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** * 여성임원 및 유리천장해소노력을 기관투자기준에 반영 권고, 통계 생산·관리 등
	3 혁신성장을 견인할 세대별 여성일자리 정책 강화 ○ **(청년 여성)** 20-30대 청년여성의 일자리 지원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취·창업 커뮤니티 및 멘토링 운영 ○ **(30대 여성)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전문적 취업지원**을 위해 사례관리형 **「경력이음서비스*」 도입** * 전공·경력을 고려, 전담인력이 상담·훈련, 구인 알선 등 全과정 통합 서비스 제공 ○ **(중장년 여성)** 중앙정부, 광역-기초 지자체 협치를 통해 패션의류 등 지역 산업을 발전시켜 **'중장년 여성 희망 일자리'** 창출
	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종합 서비스 시행 ○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**'상담-수사지원(채증)-삭제지원-소송지원-사후모니터링'**까지 지원(상담전화 ☎1366)
	5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서비스에 대한 온·오프라인 접근성 제고 ○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확충* 및 서비스 대상** 확대 * 여성폭력 통합상담소(10개소→20개소), 장애인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신설(1개소) 등 **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대상이 스토킹·데이트폭력 피해자까지 확대 등 ○ 실시간 채팅·상담이 가능한 **'여성폭력 사이버 상담'** 활성화

가 족 분 야	**6 미혼모·저소득 한부모 가족 양육지원 확대** ○ 미혼모·한부모 가족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**양육비 지원 확대** * ('17년) 만 13세 미만, 연 144만원 → ('18년) 만 14세 미만, 연 156만원 * 한부모 가족은 중위소득 52%에서 60%(청소년한부모 60%에서 72%) ○ 초기 상담부터 자립까지미혼모·한부모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**'스스로 돕는 한부모 프로젝트'** 시범 추진
	7 아이돌봄 지원 및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문화 확대로 돌봄 부담 경감 ○ 중위소득 120% 이하 가정에 **아이돌봄 정부지원 비율 및 시간 확대** * 비율 : ('17년) 25% ~ 75% → ('18년) 30% ~ 80% (각 5%p 인상) * 시간 : ('17년) 연 480시간(1일 2시간) 이내 → ('18년) 연 600시간(1일 2.5시간) 이내 ○ 맞벌이 가정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**「공동육아나눔터」 시범운영** 및 단계적 확대
	8 결혼이민자의 인권보호 강화 및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 ○ 폭력피해이주여성 쉼터 확대(26개소→28개소) 및 **외국인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입소를 허용**하도록 제도 개선 ○ 학령기 다문화가족자녀의 학업적응을 돕는 찾아가는 자녀생활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* (현행) 만12세이하 아동 → (개선) 연령과 무관하게 초교재학 아동 포함
청소년 분 야	**9 위기청소년 조기발견, 현장중심 서비스 강화** ○ 청소년쉼터(123→130개소),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(224개→226개소), 청소년동반자(1,146→1,261명) 확대 ○ **청소년자립지원관 (4개소)지원**으로, 청소년쉼터 등 퇴소 후 갈 곳 없는 청소년의 주거와 자립 지원 ○ 가출·거리배회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상담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'찾아가는 거리상담 전담요원'이 30명에서 60명으로 확충
	10 아르바이트 현장의 근로권익 피해 예방·구제를 위한 **'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'** 운영 확대 * ('17년) 서울·수도권 일부(5명) 시범사업 → ('18년) 서울·중부권, 충청·전라권, 경상권(21명)
	11 역량중심, 자기주도형 청소년 활동 강화 ○ 역량중심 활동프로그램 모델개발 및 시범운영 ○ 자기주도 자원봉사 등 자기주도형 사회참여활동 확대 * 사회참여 프로그램(75개), 자기주도 자원봉사 전국 시범운영 확대